

國家論의 현황과 한국의 國家像

具 範 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目 次〉

- | | |
|---------------------------|--------------------------|
| I. 序 | IV. 國家論：獨立變數로서의 國家
現象 |
| II. 現代國家論의 理論的 背景 | V. 韓國의 國家像 |
| III. 國家論：從屬變數로서의 國家
現象 | |

I. 序

現代社會에서의 國家의 기능과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만연된 오늘의 국제적인 경기침체현상의 원인을 資本主義國家의 構造的 矛盾에서 찾으려는 試圖이 있는가 하면 날이 갈수록 국제적으로는 中心國家와 周邊國家간의 격차가 심해져 경제성장은 결국 從屬의 深化만을 가져온다는 비관적 지적이 있기도 하다. 英·美의 다원주의적 전통속에서는 원래 취약했던 國家論이 재음미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國家의 企業獨占뿐 아니라 모든 것을 점차 獨占해서 獨占 資本主義化했다고 社會主義 理論家들은 비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國家의 소멸을 주장했던 「맑스」의 예언과는 달리 共產主義國家들은 그들 내부의 정치적 불만을 억압하기 위한 暴力的 機構와 機能을 점점 오히려 強化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역사적

으로 부르조아지라는 市民계급과 사회를 갖지 못한 제3 세계의 開發途上國家들에 있어서는 경제성장과 社會福祉 등 社會工學的 變革의 主體로서 「國家의 기능이 마치 토마스·홉스의 「리바이어던」과 같은 權力 이상으로 강화일로에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와 같은 知性的, 實際的 맥락 속에서 國家가 왜 새로운 관심사로 새로운 分析對象으로 등장했으며, 그 논의의 추세와 개요는 어떠한가 또 그 논의가 韓國의 國家像에 미친 影響은 무엇이며, 우리의 바람직한 國家像은 어떠한가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함이 本稿의 취지이다.

II. 現代國家論의 理論的 背景

먼저 國家에 관한 논의가 왜 제기되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第2次 世界大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0年 동안의 政治學의 연구동향을 회고해 보면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각기 다른 變化를 發見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國家現象에 관한 政治學者들의 학문적 관심은 현저한 變化를 하였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

이 期間의 전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戰後 獨·塊계통의 一般國家學이 法과 制度중심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곧 國家中心의 制度的이고 記述적이었던 전통적 政治學을 극복하고자 하는 학문적 努力이 行態主義와 構造機能主義의 影響 아래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政治學에서 國家現象에 대한 無關心 또는 國家概念의 적극적 배제¹⁾가 지배적 경향이 되었다. 이 國家問題에 대한 경시경향은 이스톤이나 알몬드의 政治體系論에 가장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分析들은 政治體系와 그 環境體系 사이의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政治體系 자체를 分析할 概念的 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했다. 그 까닭에 그들의 政治體系論은 政治와 연관된 環境的 要因들은

1)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New York: Alfred Knopf, 1953), pp.106~115.

잘 설명해 주지만 막상 政治의 本質 그 自體는 전혀 설명해주지 못하는 愚를 범했다.

1960年代 末에 이르러 前半期の 그러한 國家輕視 傾向에 대한 反省 내지는 反作用이 政治學界의 일각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 反作用은 점차로 擴大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國家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어 1985年 7月 파리에서 개최된 世界政治學會의 主題로 國家問題가 채택될 정도가 되었다.

물론 政治體系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國家論의 不在에 대한 批判은 여러 視角에서 이루어졌고, 그 批判의 결과도 다양하다. 첫째로 自由主義의 主流 政治學 내부로 부터의 反省을 들 수 있다. 현대비교정치학의 중견학자인 메크리디스는 政治學者들의 관심이 政治體系에 대한 環境的 要素의 影響에만 집중되는 傾向을 「投入主義」(Inputism)라고 命名하면서 오늘의 政治學者들이 政治와 關聯되는 政治外的인 것은 무엇이든 研究하면서 정작 政治現象 그 자체는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²⁾

네틀³⁾과 페이지⁴⁾등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政治學의 분석초점을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요즈음 盛行하는 政治學도 政治體系의 도식에 盲點으로 표시되었던 政治決定體에 대한 研究로 國家現象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그러나 보다 巨視的 次元에서의 現代國家의 本質과 그 機能上的 特徵에 대한 새로운 研究는 新마르크스주의자(Neo-Marxist)를 비롯한 左派계열의 學者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이 분명하다. 그들의

2) Roy Macridis, "Comparative Politics & the Study of Government: the Search for Focus," *Comparative Politics*, Vol. I, No. 1(October 1969), pp. 79~90.

3) Peter J. Nettl, "The State as a Conceptual Variable," *World Politics* Vol. 20, No. 4(July 1968), pp. 559~592.

4) Glenn D. Paige, "The Rediscovery of Politics," Montgomery and Siffin ed., *Approaches to Development, Politics, Administration, and Change*(N.Y.: McGraw-Hill)

주장에 의하면 美國中心의 自由主義的 政治學은 그의 方法論的 理論的 結合은 제쳐두더라도 이미 現實的 妥當性을 결여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多元的 國家論은 기본적으로 國家를 다른 社會團體 中的 하나로 보고 다만 國家가 社會團體와 다른 점은 社會團體間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조정해주는 調整者의 役割을 가졌음에 불과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國家를 되도록 낮게 또 취약한 것으로 自由主義的 政治學은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그 主張과는 달리 실제로는 全世界에 걸쳐 國家는 선진사업사업사회에서나 第1次 產品을 輸出하는 第3 世界의 社會에서나 社會의 거의 모든 部門에 걸쳐 그 機能을 擴大해 왔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社會에서 제 1의 成長産業이 政府部門임을 보더라도 國家의 經濟的 活動이 얼마나 증대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광범한 福祉政策과 規制의 擴大를 통해 國家는 經濟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선진산업사회 가운데 가장 자유방임적 國家인 美國에서조차 政府部門을 통한 國民 總生産(G.N.P.)의 創出은 1970年代에 이르면 國民總生産 全體의 약 35%를 차지했다. 프랑스와 西獨에서는 각각 42%와 48%에 달했으며, 北歐諸國에서는 50%를 훨씬 상회했다는 것이다.⁵⁾ 각국에서 볼 수 있는 國家의 介入이나 統制는 비단 經濟部門에만 국한되지 않고 教育, 文化, 社會 등 각 영역에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로운 活動領域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國家活動의 범위의 擴大와 정도의 심화는 20세기 후반의 가장 特徵的인 양상임이 분명하며 그 까닭에 이 時代를 國家의 時代라고 부르는 이⁶⁾도 있게 되었다.

기존 政治學에 대한 비판자들은 政治學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

5) Karl W. Deutsch, *Politics and Government*(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0), pp. 4~5.

6) Raymond D. Duvall and John R. Freeman, "The State and Dependent Capitalis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5, No. 1(March 1981), pp. 99~148.

는지 또는 점점 확대일로에 있는 國家機能의 本質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는 커녕 그 쟁점들을 제대로 問題삼는데조차 失敗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國家論이 등장한 실제적, 지성적 맥락을 살펴 보기로 한다. 國家의 문제가 1960년대 말부터 제기 되는 보다 具體的인 文脈이나 背景은 물론, 단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두 가지 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歐美 産業社會에서의 政治·經濟的 狀況의 커다란 變化라는 점이다. 서유럽 여러 나라들의 신속한 전후 복구와 그 후 계속적인 經濟의 高度成長이 1960年代 後半에 이르면 점차로 鈍化되고, 통화팽창과 고율의 실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고질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증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중대한 변화이다. 이러한 새로운 經濟的 狀況은 여태까지의 經濟發展을 가능하게 했던 國家의 經濟的 介入과 規制를 설명해 줄 뿐 아니라 正當化해 주었던 케인즈 經濟理論과 그 基調를 이룬 自由主義的 國家觀의 妥當性을 의심케 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과 그에 관련된 社會的, 經濟的 問題를 해결해야 할 危機의 유일한 管理者는 여전히 國家以外에 다른 主體가 없음이 선진산업사회의 經濟運用의 실제에서 입증되었다. 그 결과로 國家의 本質과 그 機能上的 特徵이 再考되기 시작했음을 지적해 둔다.

다른 한편 第3世界에서도 經濟成長 信仰의 限界가 느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전통적 近代化理論과 양립할 수 없는 政治的 事態가 전개되는 등 새로운 變化의 징후들이 나타났음을 간과해서 안된다는 점이다. 한디로 經濟가 發展하면 政治는 보다 民主的으로 서구적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近代化理論의 假定은 무너졌다는 것이며, 따라서 제3세계의 현실은 그 동안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政府는 역으로 보다 권위주의적이거나 억압적 형태를 취해 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 國家의 형태를 결정하는 要因들을 모색하는 학문적 노력이 경주되게 되었다.

대체로 이러한 현실적, 지성적 상황 하에서 國家에 관한 현대적 논의가 등장했고, 또 그 맥락 속에서 국가론의 현주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國家에 관한 최근의 논의나 새로운 理論들이 기존의 理論, 특히 國家論의 不在처럼 보이는 自由主義的 國家論에 代置될 만큼 결코 성숙되었거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 理論들은 아직 도전받는 위치에 있고 풀어야 할 수 많은 논증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대단히 다양한 國家論의 並存을 보게 되었다.

Ⅲ. 國家論 ; 從屬變數로서의 國家現象

여기서는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여러 國家理論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고, 다만 그 理論들을 整理하기 위해 간단한 分類基準만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이 기준은 國家를 獨立變數로 보느냐에 따라 國家論을 兩分하고 國家를 從屬變數로 보는 경우 國家의 本質, 機能, 存在形態를 규정짓는 獨立變數의 수(하나냐, 하나 이상이나)와 종류(國內的要因이나, 國際的要因이나)에 따라 다시 細分될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각 이론이 갖는 정교한 성격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조잡한 것이고 또 지나친 單純化의 위험도 따르지만 제한된 지면에서 다양한 國家理論들을 일별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國家의 本質, 機能 또는 形態가 非國家的 獨立變數에 의해 결정된다는 理論들이다. 이 理論들은 그 獨立變數가 國內의인 것이냐 또는 國際的인 것이냐 그리고 그 獨立變數가 하나(Mono-causal)냐 또는 하나 이상(Multi-causal)이냐에 따라 다시 四分된다.

1. 國內的 要因의 從屬變數로서의 國家現象

國家의 機能과 形態가 國內的 要因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은 西歐의 근대 정치이론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전통적 마르크스理論이나 自由主義的 政治理論이나 모두 國家와 社會 또는 上部構造와 下部構

造의 基本的 구별위에 전개되고 있으며, 두 理論 공히 社會의 原因的 優位(Causal primacy)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두 理論의 차이는 下部 구조의 정치적으로 有關한 측면인 社會의 分裂을 야기시키는 要因들이 몇개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自由主義 理論에 의하면 여러 要因들이 社會의 分裂이나 集團化를 가져 온다고 보는 反面에 進통적 마르크스 理論은 오직 經濟的 要因만이 階級分化를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 두 理論은 모두 國家를 보다 근본적인 社會現象의 附隨的인 것(epiphenomenon)으로 본다는 共通點을 가진다. 그러나 중요한 差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自由主義 理論들은 한결 같이 國家를 잡다한 社會勢力의 競爭과 妥協을 통해 國民的 合意가 이루어지는 場으로 보는데 반해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國家는 지배계급의 支配를 위한 執行委員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國家에 대한 自由主義 理論의 現代的 표현은 로버트·다알 등의 多元的 民主主義 理論과 傳統的 近代化 理論 등을 들 수 있고, 國家에 대한 마르크스 이론의 범주에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蘇聯의 관제이론인 國家獨占 資本主義 理論, 獨逸의 新正統派 마르크스주의자들의 國家導出 理論(Derivation theory), 및 밀리반트의 資本主義 國家理論⁷⁾ 등을 들 수 있다. 獨逸의 國家導出 理論이 國家獨占 資本主義 理論에 대한 反論으로 제기 되었음을 보면 두 理論 사이의 差異의 심각성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채택한 分類基準이 그 차이를 부각시킬 만큼 정교하지도 않고 또 그 차이를 밝힐 계제도 아니다. 다만 國家獨占 資本主義 理論은 레닌의 帝國主義 理論에서 출발했음에 반해 국가도출 이론은 맑스의 資本論을 그 출발점으로 해서 資本의 論理에서 國家現象을 도출했다는 차이만 밝혀둔다.

7) Ralph Miliband,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London: Winfield and Nicholson, 1969).

2. 國際的 要因의 從屬變數로서의 國家現象

이 범주에 속하는 理論들의 공통점은 國家의 機能과 형태가 국내적 요인들 보다는 국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한 나라의 國家現象에 影響을 미치는 國際的 要因으로서는 흔히 외국의 군사력 내지 정치력과 경제력이 거론된다. 간단히 말해서 國家現象은 戰爭과 交易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國家現象이란 한 나라의 어떤 특수한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적 결정 또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體制形態와 같은 構造的, 制度的 側面이나 한 나라 안의 社會勢力과 그들간의 政治的 關係와 같은 聯合類型(coalition pattern)⁸⁾을 뜻한다.

國際的 經濟關係가 第3 世界의 國家現象을 규정한다는 理論은 오늘날 여러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從屬理論, 中心部—周邊部(Center-Periphery) 理論, 新植民主義理論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그 중 가장 原型的인 理論은 윌라슈타인(Immanuel Wallerstein)의 世界 體制論(The World System Theory)일 것이다.

이 理論에 의하면 第3 世界의 國家의 형태와 기능은 資本主義라는 世界的 單一體制 내에서 차지하는 周邊的 位置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理論은 이 범주에 속하는 여타 理論들과 마찬가지로 從屬的인 周邊部 國家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國家形態上的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이 理論은 왜 어떤 第3 世界의 國家는 보다 自由主義的이고, 다른 國家는 보다 抑壓的인지 또는 어떤 國家는 民間政府形態를 취하는데 반해 다른 國家는 군사정부를 갖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다음으로 國際的 勢力關係가 국내정치에 유형을 결정한다는 理論들을 지적 할 수 있다. 두말 할 나위도 없이 外勢가 국내정치에 影響하

8) Peter Gourevitch, "The Second Image Revers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2, No. 4(Autumn 1978), pp. 881~911.

는 가장 명백한 형태는 侵入과 占領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相異한 體制에로의 分斷이 美·蘇 양국의 분할 점령의 결과라는 사실이나 체코와 헝가리의 改革이 蘇聯의 侵入으로 좌절된 현대적인 事例에서 보듯이 外勢의 侵略과 占領에 의해 國家形態가 결정되는 歷史的 實例는 그외에도 허다하게 많다. 보다 일반적 차원에서 國際環境의 부정 부상태가 내포하고 있는 威脅과 機會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형태가 결정된다는 理論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 그 좋은 예로는 16·7세기에 있어서 東歐에서의 절대군주제의 등장을 설명한 안더손의 절대주의 국가⁹⁾를 들 수 있다.

끝으로 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 國際的 要因과 國內的 要因의 複合的 影響으로 國家의 형태와 기능이 결정된다는 理論을 들 수 있다. 그 理論들의 一般의 논지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각 理論家마다 각기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複合例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생략기로 한다.

IV. 國家論 ; 獨立變數로서의 國家現象

위에서 살펴 본 여러 理論들과는 크게 대조되는 理論들로서 이 理論들은 國家의 本質이나 機能이 다른 獨立變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기 보다는, 國家는 國內外的 壓力이나 影響으로부터 獨自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能力, 즉 自律性(State autonomy)을 갖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플라토나 헤겔의 國家論이 國家의 자율성이 완전히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獨立變數로서 國家를 想定하기는 대단히 곤란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理論을 찾아 보기도 힘들다. 다만 國家의 機能과 本質을 從屬變數로만 보는 還元論의 國家論에 대한 반

9) Perry Anderson,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London: New Left Books, 1974).

作用으로 國家의 相對的 自律性을 강조하는 理論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범주의 理論들은 다시 국가가 국내적 변수에 대한 自律的이나 國際的 變數에 대해 自律的이나에 따라 다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이론을 嚮량자를 위시한 新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¹⁰⁾이나 국가 중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전개되어 왔고, 후자의 이론으로서는 新重商主義者들의 이론을 들 수 있다.

소위 국가 중심의 新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국가를 경제관계의 단순한 附隨現象으로 보는 經濟的 還元主義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상당한 自律性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國家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사회복지, 국유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기타 政府介入 등과 같은 資本家 계급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대하는 많은 정책을 수행해야 했고, 또 할 수 있는 自律的 能力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람씨(Gramsci)와 폴란차(Poulantzas)의 國家理論을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新마르크스主義者들은 맑스, 엥겔스, 레닌으로 연결되는 소위 正統派 맑스주의의 國家論에 대한 비판을 그들의 공통적인 出發點으로 하고 있다.¹¹⁾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正統派 맑스주의 이론은 國家를 經濟란 下部構造의 從屬變數나 부수현상으로 보고, 資本主義國家를 부르쥬아 계급의 執行委員會로 보았다. 이에 대해 新맑스주의자들은 正統派 맑스주의 이론이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선진 자본주의의 현실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의 발전상을 보면 國家는 자본가 계급의 계급적 지배의 도구로서의 성격보다는 점점 노동계급 까지를 포함하는 超階級

10) Nicos Poulantzas,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London: New Left Books, 1968).

11) Martin Carnoy, *The State and Political Theory*(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84); 朴相燮, 「現代資本主義國家論」(한울, 1985)등을 참조할 것.

的, 汎國民의 合議體로서의 성격을 띠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이론간의 괴리에 직면해서 新맑스주의자들은 正統派 맑스주의자들이 간과했던 새로운 「맑스」를 발견함으로써 사회의 계급적 분석이라는 맑스주의의 기본성격은 견지하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현실을 설명하는 새로운 國家論을 제시하게 되었다. 사실상 맑스나 엥겔스는 國家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단편적으로 그들의 방대한 저작의 여기 저기 상이한 文脈 가운데 남겨 놓았을 뿐 일관된 체계적인 國家理論을 남겨 놓지는 않았다. 그래서 新맑스주의자들은 그들의 國家理論은 맑스의 목시적이고 불완전한 理論의 完成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新맑스주의적 國家論의 출발점은 안토니오·그람씨에 의해 제공된다. 제 1차 대전 전후의 이태리 共產黨의 理論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던 그는 그가 시도했던 근로대중의 革命運動이 다수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共產主義 革命運動이 아닌 팻시즘을 지지함으로써 失敗한 것을 체험했다. 그 失敗의 原因이 政治와 國家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誤解에 기인됨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람씨의 새로운 견해에 의하면 國家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 계급을 억압하는 단순한 強制的 道具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적극적으로 지지케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람씨는 자본가 계급의 規範과 價値의 일반화를 통한 지배를 헤게모니(Hegemony)라고 概念化한다. 國家는 강제적 도구일 뿐 아니라 헤게모니의 담당자이다. 따라서 國家는 노동계급의 이익과 필요를 결정하는 政治的, 道德的 機能의 담당자로서 생산관계의 再生産에 있어 中樞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의 理論은 종전까지 經濟的 下部構造의 부수현상으로 보던 上部構造, 특히 이데올로기와 國家의 독자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폴란차는 1960年代 후반 그람씨의 이론을 알투세의 구조기능적 입장을 바탕으로 재정립했다. 構造主義的 맑스주의는 경제적 결정론을 拒否하고 대신에 經濟的 基礎로 부터 政治와 이데올로기의 相

對的自律性を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生産樣式이라는 맑스의 概念은 經濟, 政治, 이데올로기라는 세계의 서로 相異한 구조(structure) 또는 層(level)을 포함하게 된다. 그 세 가지 중 經濟的인 구조가 언제나 궁극적으로 國家를 결정하지만 어떤 때(conjuncture)에는 經濟와 國家 그 두개가 별개인 경우가 있고, 그 때는 國家는 자율적이라는 것이다. 經濟, 政治, 이데올로기 세계 중 어느 것이 支配的인 構造가 되느냐는 특정한 社會構成體의 特性에 달렸다고 본다. 國家가 독자적이라면 國家도 장악해야 되고 그 장악하는 政治鬭爭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選舉에 의한 共產黨의 權力掌握을 正當化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폴란차는 사회계급의 성격, 계급대립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國家의 役割, 그리고 그 계급대립의 國家에 대한 影響을 중심으로 國家의 本質을 규명코자 했다.

그람씨에 비해 正統派 맑스주의에 가까운 폴란차는 국가의 형태와 기능은 계급관계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國家는 그가 존재하는 社會體系의 凝集과 規制(Cohesion & Regulation)의 요소로서 生産에 있어서의 階級對立으로 부터는 상대적으로 自律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國家는 계급국가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자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람씨와 폴란차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新맑스주의자들의 先進資本主義 國家에 대한 論議는 제3세계에 있어서도 國家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契機가 되었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분석하기 위해 발견되어 온 그 國家論과 階級的 視角이 제3세계의 社會와 國家에 적용되기에는 그 社會的 條件과 存在樣式 등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난점이 있다. 그 相異한 점이란 제3세계 國家들이 국내적으로는 西歐式 資本主義의 階級구조를 대부분의 경우 缺如하고 있다는 것이고, 國際的으로는 대부분의 제3세계 國家들의 先進國家와의 關係가 不平等 내지 從屬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論議의 초점은 國家의 대내적 자율성의 본질과 기반, 그리고 대외적 자율

성의 한계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듀발과 프리만은 종속적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國家의 기본적 특징은 國家自體가 자본축적의 주체라고 주장한다.¹²⁾ 그들은 國家를 企業家的 國家(Enterpreneurial state)라고 규정하면서 國家는 그 자신이 자본가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두 주요 계급의 창출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新重商主義者들의 입장은 로버트·길핀의 理論¹³⁾에 의해 잘 대표된다. 그에 의하면 國家는 어느 한 集團의 목적이거나 여러 集團의 聯合의 목적에 還元될 수 없는 어떤 國家利益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실제로 그 目的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國家는 그의 目的을 실현하려고 일관되게 행동할 能力이 있고, 그의 意思를 관철하기로 작심만 하면 아무리 큰 多國籍 企業이라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은 다분히 강대국의 경우어나 있음직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國家는 국가 내에 존재하는 어떠한 集團의 利益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實體라는 觀點이다.

이상에서 다양한 여러 理論들을 통해 國家에 대한 現代的 論議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느 이론도 多元論의 自由主義 이론이나 正統派 맑스주의 이론 이외에는 國家의 一般理論으로 주장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다시 말해 그 어느 이론도 보편성을 갖는 一般理論이 아니라 특수한 狀況下에 있는 具體的인 國家들을 조명한 部分理論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抽象的인 일반이론으로서의 國家論보다 우리 現實의 具體的인 狀況에 대한 냉엄한 檢討와 認識이 先行되어야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國家論의 定立이 오늘날처럼 切實한 때가 없다고 생각된다.

12) Duvall and Freeman, 1981, 앞의 글 참조.

13) Robert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New York: Basic Books, 1975).

V. 韓國의 國家像

1. 國家論의 影響과 限界

앞 章에서 복잡다기한 國家論의 現況을 일별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정치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다원적 국가이론 등의 자유주의 국가이론은 가볍게 다루면서 주로 좌파의 도전적인 國家理論만을 부상시킨 듯한 自責感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도전적인 국가이론의 경향만이 타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어떤 知性的 맥락과 현실적 배경에서 그러한 國家論이 등장하고 성행하게 되었으며, 그 이론의 개요와 한계는 무엇이며, 또 韓國的 現實에 적용했을 경우의 妥當性여부 등에 대한 疑問을 풀고자 했을 따름이다.

美洲地域에서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從屬理論, 官僚의 權威主義理論, 新마르크스주의理論 등 일련의 國家論이 韓國의 學門과 知性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로 그 동안 韓國의 사회과학계 전반에 유행했던 行態科學의 접근방법과 近代化論 때문에 경시되었던 國家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소생시켰다는 점이다. 원래 政治學은 國家의 法, 制度, 理念 등을 研究하던 학문이었는데 行態科學의 등장으로 國家는 政治體系로, 제도와 법은 구조·기능이란 概念으로 대치되어 政治의 環境的 要因에 대한 分析에로 政治學의 기본성격이 변모되는 듯 했다. 어찌면 無思想과 沒價値性 속에 안주했던 韓國의 社會科學界에 行態主義의 도입과 영향은 沒價値的 학문성향에 오히려 正當化의 구실을 제공했는지도 모른다. 行態主義라는 학문적 조국인 미국에서 1960년대 말 월남전참전에 대한 反戰論에서 비롯된 反體制運動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했던 미국 지성과 국민들에게 아무런 역사적 방향과 지성적 示唆도 해주지 못한 無力感을 국민들은 경험했다. 그 무력감이 미국 정치학계에 「行態主義以後의 革命」(Post-Behavioral Revolution)을 가져 온 계기를 제공

했다.

우리의 경우, 그 계기를 자주적으로 의식해서 실천하지 못한 채 歐美學界의 또 다른 새 傾向인 國家論을 받아들여 그 理論과 巨視的 분석들로 자신의 문제를 조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學門的 植民地의 舊殼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학계의 서글픈 모습을 眞理의 普遍性과 學門的 宇宙論的 世界라는 名分으로 正호도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후진적인 학습은 빨리 탈바꿈해야만 된다. 그와 같이 비록 구미선진국에서 도입된 國家論이고, 또 그 이론이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타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國家가 당면한 과제나 국가 현상 전반을 先進國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입장이나 開途國의 입장에서 생각해 하고 조명하게 했음이 분명하다.

둘째로 그 國家論은 한국의 학계나 특히 젊은 知性들에게 우리 國家에 대한 잘못된 擬似環境(Pseudo Environment)과 공정하지 못한 認識을 심어 놓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잘못된 의사환경과 공정하지 못한 認識이란 다음과 같은 固定觀念을 뜻한다. 예컨대 國家는 反民衆的 지배적 政治聯合에 의한 중앙통치체제이고, 그 國家를 지탱하는 主要因은 支配聯合의 反民族的 매관성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 宗主國으로서의 美國의 支援이라는 주장, 大韓民國은 당초부터 反民族的 從屬國家로서 성립되었다는 주장,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모순속에서 파악하려는 經濟決定論的 思考, 國家를 지탱하는 지배적 政治聯合의 존재에 대한 대항개념으로서의 「民衆」의 定義, 韓國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와 식민지적 권위주의로 일관되고 있다는 생각, 南美와 같이 軍·官·財閥의 연합이 政治的 지배의 본질이라는 생각 등을 들 수 있다.

그 고정관념이 침투되는 것은 두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급속한 발전의 불가피한 부산물인 無理, 矛盾, 病幣, 마찰, 긴장 등의 문제점이 어느 社會에서고 있게 마련인데 그 문제점을 한꺼번에 속시원히 조명해 주는 자[尺]나 巨視的 分析들이 바로 그

國家論이라는 錯覺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속의 여러 矛盾이 경과적이나 구조적이나에 따라 認識의 次元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現實 이상으로 무서운 설득력과 감화력 등 교육적 힘을 갖는 요소가 달리 없다. 따라서 現實의 改善으로 眼前的의 矛盾과 不條理는 경과적 현상으로 반듯이 是正되고야 만다는 認識을 갖게 할 때, 그 否定的인 國家에 대한 고정관념은 설 땅을 잃게 된다. 둘째로 韓國의 現實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분석한 自我準據的인 틀이나 이론이 정립되어 있었다면 그 고정관념이 들어설 수 없음은 자명하다. 다시 말해 도입된 이론을 주체적으로 소화할 學門的 業績의 축적과 知性的 能力이 있으면 그 國家論의 적용한계가 스스로 분명해 진다. 근자에 國家論의 최근 연구동향과 그 반성을 통해 韓國政治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진지한 학문적 노력¹⁴⁾ 경주되고,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시도됨¹⁵⁾은 이 나라의 國家現象을 自我準據的의 틀로 다룰 수 있는 밝은 學門的 將來를 약속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國家論은 韓國의 中産層, 中間階級 또는 市民社會의 概念, 성격, 역할등에 관한 논쟁을 학계와 젊은 知性들간에 불러 일으켰다는 점이다. 19세기 유럽의 부르조아社會의 대명사가 市民社會이었는데 그 市民社會의 동질적인 역사적 기반은 20세기에 와서 圓화된자이질적 大衆社會로 탈바꿈했다. 그 뜻의 市民社會는 유럽에도 이제 없고 동양에서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民間社會 또는 市民社會(Civic Society)란 概念으로 대치되었다.

그 市民社會와 『國家』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자율성이 논란되는데 선진산업사회에서는 市民社會의 규제로부터 國家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가가, 韓國과 같은 開途國에서는 市民社會에 대한 國家의 지배적 현상이 논쟁의 쟁점이 된다. 또한 중산층, 중간계급의 범위와 성격에

14) 朴光周, “國家論을 통한 韓國政治의 패러다임모색 : 최근의 연구동향과 그 반성,” 『현상과 인식』, 제 9권, 2호, 통권 32호(1985년 여름).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研究論叢』, 85-17의 姜光植, 朴相燮, 廉弘喆, 임현진의 論文 .

관한 사회학적 접근이 시도되고, 그들을 포함하는 市民社會를 民衆이란 概念으로 해석해야 되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다.

韓國 중산층의 성격규명에서도 일부 과격한 지성들은 중산층이 南美白와는 달리 體制同調的이라고 하면서 자본가계급과 凝制的인 계급적 연대를 느끼고 있어 反民衆的이고 親지배계급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 까닭은 중산층이 개혁은 원하나 급진은 아닌 본질을 갖기 때 문이라는 등의 논란이 있어 中產屬과 市民社會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급한 형편이다.

요컨대 국가론의 정치경제학 해석은 여태까지 추진한 近代化政策을 부정하고 그동안 이룩한 社會經濟的 變化를 인정하지 않는 視角을 남겼다. 그 시각은 70年代에 이룩한 開途國의 경제성장이 선진국에 비해 相對的 貧困을 심화시켰고, 따라서 從屬의 深化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視角으로서 한국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福祉, 雇傭, 成長, 物價, 公害, 輸出障壁, 安保等 당면과제들을 오늘의 歐美先進國들에 있어서와 같이 國家의 縮少調整으로 해결할 수 없다. 歐美에서와 같은 성숙된 市民社會의 기반이 없는 韓國의 現實에서는 國家機能의 무조건 縮少가 아니라 適正調整이나 분야에 따라서는 오히려 擴大調整을 통해 國家의 당면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2. 韓國의 國家像

도대체 韓國의 國家像은 어떤 것이며 어떠해야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들은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학문적 업적은 거의 없다. 어쩌면 平和共存의 死角地帶, 國際化에의 熱風, 급속한 發展主義의 몸부림 등 國內外的 狀況의 급속한 템포에 몰려 모두가 沒自我的 狀態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일런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 社會가 市民社會의 낭만과 동질적 기반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現代版 「리바이어던」인 國家의 巨大한 힘에 짓눌려 우리 모두가 고독하고 무

기력한 大衆社會 속에 분해되고 침전되었기 때문일런지도 모른다. 韓國의 國家像은 歐美大陸에서 온 議會制, 憲法 등의 制度와 中國, 韓國, 日本을 잇는 東洋思想의 흐름과 융합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東洋思想과 유럽 思想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國家像의 思想的 基礎를 아직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德治政治의 具現을 國家像 중 가장 중요한 德目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유럽의 哲學,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國家論에 필적할만한 것은 東洋의 儒學이며, 그 대표는 孔子와 孟子的 國家論이다. 孔子가 머리속에 그린 國家와 플라톤의 國家가 대단히 유사한데 그것은 都市 國家와 周나라 시대의 國家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플라톤이 아테네의 衰退期를 맞아 아테네를 부흥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理想國家로 묘사한 것과 같이 孔子도 周나라가 衰退한 春秋戰國時代에 나와 그 周나라를 다시 한번 復興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中國의 國家思想의 基本은 周公이 쓴 尙書 즉 書經인데 그 尙書에는 周나라 앞의 王朝인 殷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周나라가 나라를 세웠는가라는 內容이 적혀 있다. 殷나라는 千年以上 계속된 아주 오래된 나라로서 中國의 文明은 기본적으로는 殷나라 시대에 성립했고 漢字 등도 그 殷나라 시대의 것이다. 殷나라는 그 뜻에서 中國文明의 源泉 같은 것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國王이 있었지만 그 王을 地方의 豪族인 周的 武王이 타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政變은 단순히 武力으로 타도한 것이 아니고 殷나라 마지막 王인 紂王이 도덕적으로 퇴폐해져 기강이 문란해지고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論理에서 설명되고 있다. 殷나라 백성들에게 周公은 되풀이해서 당신들의 王은 德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이 나에게 政治를 맡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易姓革命의 哲學은 하나의 기본적인 國家哲學이다. 君主에 德을 몸에 부치게 하려면 주변에 德이 있는 家臣들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德에 의해 다스리는 政治인 德治政治가 儒敎의 基本이며, 우리의 경

우에도 아직도 타당한 정치적 규범이 되고 있다.

둘째로 國家는 社會속의 支配的인 規範秩序인 만큼, 社會秩序의 規範的・理念的 基礎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점이다.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인 까닭에 이 像에 따르면 國家와 社會를 구분할 수 없다. 이 추상적인 國家像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焦點은 그 나라의 혼과 정신이 모든 社會秩序의 規範的・理念的 基礎가 되어 法の 精神이 되고 政府를 규율하는 도덕적 不文律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월이 흘러 정부와 정권이 바뀌어도 그 社會秩序의 규범적・이념적 기초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동양사상으로 돌아가 周公이 쓴 「儀禮經傳通解」에 따르면 「儀禮」는 周나라 시대의 國家의 道德的인 準據이며, 「률」이었다는 것이다. 그 책에는 國家의 지도층인 士大夫들 간의 서로의 禮儀, 즉 누가 왔을 때 그 사람이 同格의 사람이면 반드시 문 바깥까지 마중나가야 된다는 것 등이 기술 돼 있고, 그 禮는 중국에서 아직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 革命後의 中國에서 料理와 儀禮는 革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뜻에서 「禮」는 中國文明의 骨髓이며, 동시에 우리 李朝의 유교적 정치문화의 근본이기도 했다. 우리의 경우 낡은 유교문화나 「禮」를 소생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東洋思想의 水路를 言及한 것이 아니다. 세월이 바뀌고 권력과 법이 바뀌어도 國家는 社會秩序의 規範的・理念的 基礎로서 변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基礎를 우리 모두 무엇보다 소중히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國家의 기능을 市民社會 또는 民間領域의 質・量的 成熟의 정도에 맞게 再調整해야 됨을 지적해 둔다. 開途國에서는 흔히 민간 영역이 성숙되지 않아 모든 사회변동과 國家發展의 주역을 國家가 擔當해야 된다고들 한다. 韓國의 경우에는 그 동안의 國家主導下에 이룩된 經濟成長과 社會變動으로 폭 넓고 깊이 있는 中間階級이나 民間領域이 형성되었다. 이제 그 中間階級の 영향력과 그 市民社會의 활력을 무시하고 國家나 國民의 에너지를 생각할 수 없다. 그 中間層의

사회과정과 정치과정의 參與가 제도화되지 않고 國家發展을 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民主的 價値, 信條, 熱望을 존중하고 民主的 節次와 制度를 活性化하는 民主化 없이 國家의 權威는 正統性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民間領域에 방입할 것은 國家가 통제하고 國家가 적극 개입해야 할 곳은 오히려 방입되고 있으니 國家機能의 재조정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우리의 國家像은 現代의 發展的 指向을 가져야 된다는 점이다. 家族이 外延的으로 擴大된 概念이 國家라는 전통적 국가관에 머물 수 없고, 國家建設(nation-building)이란 命題를 근대적 國民國家 建設 속에서 확인해서도 안되며, 그렇다고 脫物質主義的 價値觀의 지향¹⁶⁾ 속에서 우리의 國家觀을 비약시켜서도 안된다. 선진국에서는 절대주의시대를 통해 근대적 통일을, 산업주의시대를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산업사회의 성숙기를 통해 人間의 문화적 욕망, 즉 生活의 質(Quality of life)을 성취하는 등 단계적 접근을 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했던 과제들을 동시적으로 조화있게 성취해야만 된다. 우리 國家가 지향할 現代的 指向이란 바로 서로 상충되는 근대 엘리트 民主主義, 現代 大衆民主主義, 후산업사회의 命題들, 즉 安保, 產業化, 公害, 人權, 道德性, 生活의 質 등의 과제들을 어떻게 조화있게 달성하느냐란 政治的 知慧 속에 담겨 있다.

우리 모두 그 政治的 知慧를 창조하여 실천할 때 약동하는 韓國의 國家像이 생긴다고 확신한다.

16) Inglehart, *A Silent Revolution*, 1977.